



## 그리스, 구제금융 합의안 국민투표 표결 결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EU 정상들이 그리스 위기 구제안을 내놓은 지 며칠 안 돼 그리스가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에 돌발 변수가 발생함.
  -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부채 탕감을 골자로 한 EU 정상들의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밝힘.
    - 그리스 정부의 국민투표 시행 시기는 2011년 12월 4일로 예상됨.
  - 유럽 합의(안)가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될 경우 그리스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시위나 파업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.
  - 그러나 유로존 합의(안)가 부결될 경우 그리스 내각은 실각하고, 그리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중단, 유로존 축출, 채무불이행 선언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.
- 한편, 독일, 프랑스, 그리스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처하고자 G20 정상 회의(11월 3~4일)에 앞서 11월 2일 긴급회의를 가짐.
  - 이번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에 대해 EU 정상 합의안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함.
  - 한편, 이달 중순까지 집행되어야 하는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80억 유로를 국민투표 실시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.
- 그리스의 국민투표 실시 발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그리스 위기의 존재감이 확인된 것은 그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.
  - 6% 넘게 치솟은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위기 확산을 우려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양보를 끌어낼 것으로 보임.

- 유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애당초 충분치 않았다는 일각의 여론은 그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.
  - 그리스가 부채 규모를 감당하려면 국채 상각률이 50%에서 70% 정도로 상승해야 되고, 위기 확산 방지와 유로존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해 EFSF의 재원도 1조 유로보다 한층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.
-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오히려 신속한 유럽위기 해결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옴.

(Wall Street Journal 11/2, 11/1)